

# 하청노조 1137곳 교섭 요구... 車·조선 등 산업현장 '진통'

##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주요기업 잇달아 사용자성 판정  
실제 교섭·노동쟁의 단계 진입  
원청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조짐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산업계 노사관계에 새로운 '트리거(trigger,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흐름이 산업 현장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의 원·하청 교섭을 전제로 한 사용자성 판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 구조였다면 앞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 초기업·원청교섭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로는 실제 교섭과 노동쟁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의 급식·시설

관리 도급업체인 웰리브지회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웰리브지회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한화오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 논의가 기존 생산 공정을 넘어 급식·시설관리 등 지원업무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도 이르면 올해부터 하청 노조 3곳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가 포스코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을 유지했다. 초심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건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다. 경북지노위는 4월 8일 포스코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등 하청 노조 3곳과 교섭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판정했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도 하청 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한국연합플랜트노동조합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미이행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GM 하청 업체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원청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GM에 단체교섭을 요구 중인 노조는 한국GM부품비정규직지회(더원테크·엘림비엠에스·비원테크), GM부품불류지회(경륜로지스틱), 부평공단지회(디지에프 오토모티브) 등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제조업 전반으로 확

산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행 이후 이달 초까지 하청노조 1137곳이 원청 43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관련 조합원 수만 16만 명에 달하며 중노위는 이에 대한 판단 여부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며 사용자범위와 교섭의제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향후 원청이 사용자성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협력사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기존 아웃소싱(외주, 외부조달) 체제를 인소싱(내부조달)으로 바꾸는 등 구조조정 가속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축소와 투자 유보, 생산기지 해외 이전 같은 현실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노조법 개정이 자칫 기업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불안도 확산되는 분위기다"고 지적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화성특례시의회

민심은 의회로  
의회는 민의로

# 화성특례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일시** | 2026. 6. 19.(금) ~ 6. 26.(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화성특례시의회는 늘 107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 1년새 해외증권투자자 2배 ↑

한은 환율 상승압력 작용 분석  
"투자소득 환류 기반 확충 필요"

우리나라의 해외증권투자자가 빠르게 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은 환율 하락 요인이지만, 해당 소득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유보·재투자될 경우 환율 안정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해외투자자와 투자소득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자는 412억달러로 2024년 497억달러보다 감소했다. 반면 해외 증권투자자는 1403억달러로 2024년 670억달러의 2배를 웃돌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 증권투자 비율도 2024년 3.6%에서 2025년 7.5%로 상승했다.

해외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대외자산 축적과 투자소득 확충에 기여한다. 외화유

동성 완충력과 대외지급능력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투자소득이 실제 외환시장으로 얼마나 환류되느냐다. 해외 직접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 국내로 배당·송금되지 않고 현지에 유보되거나 재투자되면 통계상 투자소득 흑자와 실제 외화 유입 규모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보고서는 향후 외환수급 점검 체계를 투자소득의 실제 환류 여부 중심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상호 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과 이주현 조사역은 "투자소득 증가는 대외지급능력을 보완하는 완충장치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가 국내 성장기반 강화나 환율 안정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환율 안정은 투자소득의 환류 기반 확충과 국내 성장잠재력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 석유 최고가격 동결... 손실보전 기준 마련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체의 손실보전 기준을 철저하게 '실제 지출된 원가' 중심으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을 근거로 한 '석유관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지원금 산정의 바탕이 되는 원가는 최고가격 적용 기간 중 투입된 ▲원유도입비용(원유·석유제품 구입비, 운송비, 보험료, 부대비용) ▲생산 및 판매비용(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기타 관련 비용을 합산해 구

정했다. 원가산정은 각 정유사별 개별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정유업체의 평균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이 내로 구성되며, 원가산정의 적정성 평가와 적정 마진 결정, 신청 서류 검증,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액수 심의 등을 총괄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중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